데스크 시각

‘문화 광주’가 꿈꾸는 시장은?

박 진 현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광주일까요? 부산일까요?” 지난해 여름, 서울에서 활동하는 미술평론가 K가 필자에게 보내온 카톡 메시지의 일부다. 그러면서 그는 ‘해운대에 아세안문화원 건립’이라는 제목의 한 일간지 기사를 링크해 ‘친절하게’ 전송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의 콘셉트와 많이 겹친다는 느낌이 들어서였다.

아세안문화원의 존재감

지난해 9월 문을 연 부산 아세안문화원은 이름 그대로 아세안 문화 교류의 허브를 표방한 정부 산하 기관이다.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 사업으로 173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운대구 좌동 공공청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면적 6천330㎡) 규모로 건립했다. 아세안문화원 개관식에는 아세안 10개국 외교부 장관과 아세안 관련 문화·정책 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들은 전시 시설, 문화 체험 공간, 동남아 문화 체험실, 멀티미디어실, 교육·연구 시설 등을 둘러보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니나 다를까. 아세안문화원은 개관 이후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특히 문화 교류의 대상국인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들의 다양한 전시와 공연은 영남권의 관람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문화전당으로서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부산의 도시 브랜드나 인프라의 파괴력을 감안한다면 아시아의 문화 플랫폼이 되는 건 시간문제일 듯하다. 지난해 K가 카톡을 보내온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다.

사실 아세안문화원이 2015년 개관한 문화전당을 위협할 가능성은 다분하다. 그도 그럴 것이 아세안문화원이 문화 교류의 파트너로 정한 아세안 10개국은 오래전부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광주시가 핵심 교류 대상권으로 공을 들여 왔던 국가들이다. 특히 아시아 문화를 수집·연구·전시하는 아세안문화원 상설 전시관의 기능은 문화전당 정보원의 사업 영역과 겹친다. 때문에 정부의 예산 배정이나 관람객 유치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문화전당의 개관 효과를 반감시키는 악재라 하겠다.

아세안문화원 설립을 두고 당시 지역 문화계에선 문화전당의 위상을 축소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설이 파다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돈만 축내는 대형 복합 시설’이라는 이유로 문화전당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의 ‘가이드 라인’ 덕분이었는지, 이후 문화전당의 일부 기능과 중복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아세안문화원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화전당을 주축으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수년간 표류하게 된 데에는 정부의 파트너인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도 빼놓을 수 없다. 문화전당의 운영 주체를 둘러싼 논란과 옛 전남도청 별관 복원 등 굵직한 현안이 불거지는 동안 광주시의 문화 컨트롤 타워는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냈다. 아니,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고 보는 게 더 옳을 듯하다.

문화 예술 즐기는 지도자

물론 광주시 조직도에는 지난 2005년 전국 최초로 신설된 문화체육관광실(문화정책실)이 있다. 국책 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취지가 무색하게 문화 부서 공무원들이 평균 6개월~1년 만에 교체되면서 수많은 문화전당 현안에 ‘전략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2015년 9월 개관 전후로 현 이진식 문화전당장 직무대리까지 두 명이 바뀐 데 반해 비슷한 기간 문화정책실은 김일용, 염방열, 정민곤에 이어 최근 취임한 박 향 실장까지 네 명이 거쳐 갔다.

실무를 챙기는 문화 부서 공무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전문 공무원을 키우기 위해 2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인센티브까지 주는 일부 지자체와 달리 광주는 바뀌어도 너무 자주 바뀐다. 오죽했으면 얼마 전 문화계 모임에서 한 지역 인사가 박 향 실장에게 “이번엔 얼마 있다가 가실 거냐?”라는 뼈 있는 농담을 건넸겠는가.

문화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대인 예술시장, 동구 예술의 거리, 전당 주변 도심 활성화 사업 등 광주시의 문화현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지난 2007년 국책 사업으로 10년 동안 수백억 원이 투입됐지만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대인예술시장과 예술의 거리가 대표적인 예다. 더욱이 정부의 예산 지원이 끊기는 내년 이후의 로드맵은 정해진 게 없는 상태다. 장기적인 비전 없이 매번 주관 업체를 선정해 일회성 행사로 치르는 데 급급하다 보니 축적된 노하우와 역량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다.

6·13 지방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입지자들이 문화 예술 관련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역벨트, 문화부시장 임명, 문화수도 그랜드 비전 ‘광주 센트럴파크’ 등 묵직한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문화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메가 프로젝트 추진도 물론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제 화려한 ‘말의 성찬’보다는 긴 안목과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춘 ‘준비된 문화 시장’이 나올 때도 됐다. 전시회나 음악회의 순수한 관객이거나 가난한 예술인들의 고민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선배 같은 리더이면 더 할 나위 없겠다. 그리하여 그가 끼울 첫 단추는 문화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는 문화 컨트롤 타워를 바로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jhpark@kwangju.co.kr

기 고

촛불 혁명은 제2의 4·19 혁명이었다

이 병 열
4·19민주혁명기념사업회장

어느덧 4·19혁명 58주년이 다가온다. 역사를 반추해 보면 촛불 혁명은 제2의 4·19혁명이었다. 혁명의 발상 원인이나 진행 과정,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차이점은 불의에 항거한 시위 도구로 촛불을 사용해 4·19와 같이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다.

1960년 시위 문화와 2016년의 시위 문화는 차이가 컸다. 촛불 혁명은 성숙한 평화 시위 문화로 온 인류를 감동케하였다. 노벨평화상을 주어도 충분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1960년 4·19혁명은 자유당 정권의 영구 집권과 부정·부패, 비리, 국민주권을 박탈한 3·15부정선거 등 불의에 항거해 전국 대도시에서 일어선 학생들과 국민이 힘을 합쳐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집권 여당인 자유당이 몰락했다. 허정 과도정부를 거쳐 내각책임제 개헌에 의한 7·29 총선으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한 제2공화국이 출범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한다. 역사를 잃어버리면 반성도 혁신도 할 수 없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경구를 떠올리며 박근혜 정권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4·19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학생과 민중에 의해 민주화 초석을 이룩한 역사로 헌법 전문에 3·1 독립운동과 더불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역사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외면한 박근혜 대통령은 제2의 4·19혁명이라 할 수 있는 촛불 혁명으로 탄핵을 받아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법정형을 선고받았다.

우리 고장 광주는 의향이요 대한민국 민주화의 시원지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때면 역사의 고비마다 한 가운데 서서 피를 흘리고 몸을 바쳐 나라를 지켜왔다. 임진왜란 당시 1593년(선조 26년) 7월16일 이순신 장군이 사헌부 현덕승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호남 의병들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위대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입증하고 있다.

“절상호남국가지보장(竊想湖南國家之保障)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 혼자서 생각해보니 호남은 나라의 울타리요 만약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순신 장군은 호남이 의향임을 증명하고 있다.

호남의 중심 도시 광주는 선열들의 의병 정신이 맥을 이어 불의에 항거한 3대 민중 항쟁 역사가 있다. 1929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과 1960년 광주 4·19혁명, 1980년 5·18 광주 민중항쟁의 역사다.

특히 광주는 4·19혁명의 시원지요 진원지다. 4·19혁명은 자유당 정권이 영구 집권을 위해 1960년 3월 15일 국민 주권을 박탈한 부정선거에 대한 항거로 시작되었다. 그날 낮 12시 45분 전국 최초로 광주 민주당원들은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기 위하여 선거 참관을 포기하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민주주의 장송 데모를 주도했다. 1000여 명의 군중과 합세하여 금남로에서 구도청으로 진출하던 중 진압에 나선 무장경찰과 충돌하면서 유혈이 낭자한 시위를 벌였다.

숭고한 4·19 정신은 5·18광주민중항쟁으로, 다시 촛불 혁명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광주 4·19역사는 소외된 채 방치되면서 대부분 시민들은 이를 잘 모른다. 상징물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광주의 3대 민중항쟁 역사는 광주 정체성과 광주 정신의 산실이며 ‘민주 성지 광주’라는 호칭도 여기에서 탄생했다. 다른 시도와 차별화되는 이들 유산을 경쟁력 있는 광주의 자산으로 삼아 관광 상품 개발이나 관광지 조성에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민중 항쟁의 역사적 현장을 ‘광주 관광 제1코스’로 지정 운영한다면 광주는 세계 속의 민주화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기 고

농업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며

박 안 수
농협 창녕교육원 교수

곡우(穀雨)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옛날부터 곡우에 내린 비는 농사에 이롭다 하여 이런 절기를 만들었을 것으로 본다. 학창시절 배운 남구만 선생의 농사와 계절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조가 떠오른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 재 넘어 사래 긴 밭을 언제나 갈려 하나니”라는 구절이다.

최근 어느 대중가수가 보릿고개를 소재로 노래를 불러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 가사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세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시대가 변하여 문전옥답의 개념을 아는 이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골에 땅이 있어도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8㎏에 달한다고 한다. 매년 연례적으로 쌀이 남게 되자 정부 당국에서는 금년과 내년에 각각 5만㏊를 목표로 쌀 생산 조정제를 계획하여, 이달 20일까지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들은 최근 시중 쌀값 상승과 재배할 대체 작목 등을 쉽게 찾지 못한 탓에 계획의 절반 정도만이 신청하고 있는 등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쌀을 원조할 수 있는 식량 원조 협약(FAC)에 가입하여 중동지역과 아프리카 등에 5만 톤의 쌀을 원조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소득 증가와 경제 발전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소득 증가와 산업의 발전이 진행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그늘진 곳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뒤돌아 볼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경제 발전과 함께 국가 정책이 수출에 많은 무게 중심이 쏠린데다 국정 최우선 과제로 여겨 체결했던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에서 우리의 농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여러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 농업에 지급되는 보조금 지원 수준은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과거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사이먼 구즈네츠 는 “공업 발전을 통해 중진국까지는 도약할 수 있을지라도 농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했는데, 매우 공감되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 식량의 자급을 달성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는 오직 유럽의 산악 국가인 스위스가 유일하다.

작금에 국민총생산(GDP)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상 크지 않다. 그렇지만 농업의 공익과 다원적인 가치는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량 안보를 시작으로 환경 보전과 홍수 조절, 경관·전통문화 계승, 지역 사회와 경제 발전, 관광과 휴식의 장소, 전원 생활의 공간, 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하다. 국격(國格) 제고까지 포함한 공익적 가치를 합산하면 수백 조에 이를 만큼 헤아리기 어려운 수준이다.

다행히 농협 등 관련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에 힘입어, 현재 발의·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정부)의 헌법 개헌안 제129조에는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문이 포함돼 있다. 농업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농업인의 권익 신장과 주권 시대를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해당 조문이 당연히 존치되도록 농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온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우리의 농업 가치가 헌법에서 새롭게 태어나 영속하기를 희망한다.

社 說

시·도 교육감 선거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6·13 지방선거의 관심이 온통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후보에 쏠리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시들하다.

선거가 두 달가량 남은 가운데 유권자들의 눈과 귀가 사실상 시·도지사 선거와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 쏠려 있는 가운데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이름을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반응은 미지근하기만 하고 ‘깜깜이 선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장만채 전 교육감의 전남지사 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전남도교육감 자리를 놓고는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과 장석웅 전 전교조 위원장, 오인성 전 나주교육장이 경쟁하고 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장휘국 교육감에 맞서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과 최영태 전남대 교수가 출사표를 던졌다.

문제는 선거가 광역자치단체장에만 관심이 쏠리다 보니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아주 저조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정책과 공약보다는 후보 인지도와 선호도에 따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감은 지역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육성과 지역 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기관의 수장인 교육감은 교원 인사권은 물론 예산 집행, 교육 과정 운영, 사교육 기관 관리·감독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유아 및 초·중등 학생 교육 정책도 수립하고 시행한다.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지역 초·중등 교육 발전의 명암이 갈린다. 시·도교육청은 매년 2조~3조 원의 예산을 교육 정책에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청 예산은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광주시·전남도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

목포·영암 ‘고용 위기 지역’ 추가 지정해야

조선업 침체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목포와 영암 지역이 정부의 ‘고용 위기 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지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게다가 전남도와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에 신청 접수하는 과정에서 허술하게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통영·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전국 6개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1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투입해 지원키로 했다.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 유지 지원금과 생활 안정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세금 징수를 2년간 유예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선업 부진으로 고용 절벽에 처한 목포와 영암 등은 이번에 누락됐다. 국내 최대의 조선기자재 집적화 단지인 영암 대불산단은 지난 2016년 12월 이후 1년 새 고용이 48.8%나 급감했고, 조선업 비중이 큰 목포의 산정농공단지도 중소 업체들이 폐업이나 도산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전남이 고용 위기 지역 지정에서 빠진 데는 지자체의 안이한 대응도 한몫을 했다. 영암군은 조건에 부합했지만 시기를 놓쳤고, 목포시는 조건 미달이라는 이유로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남도는 뒤늦게 목포시와 영암군의 통합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무엇보다 여건이 비슷한데도 영남의 4개 지역은 지정 대상에 포함되고 전남 시·군은 제외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늦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고 한다. 고용 위기 지역 추가 지정에는 목포와 영암이 반드시 들어감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유령 주식 공매도

증권 시장이 ‘자본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이유는 자본주의 경제 활동의 총합이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를 주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선 우량 회사를 선택해 수익을 올리는 공개된 장소가 바로 증권 시장이다.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회사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 등 거대 인접 국가의 증권 시장 동향은 물론 환율과 유가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개미)가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는 풍부한 정보력과 자금력까지 갖추고 있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골리앗에게는 ‘공매도’라는 신통방통한 무기까지 있으니 애초 싸움이 될 리가 없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가격이 떨어질 때 되사서 갚는 매매 기법이다.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이 기법을 자주 사용해 수익을 거두는데, 개미들은 사실상 이를 이용할 수 없으니 늘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다.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사고로 인해 유령 주식 공매도 논란이 뜨겁다.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1000원씩 배당하기로 하면서 실수로 1000주로 잘못 입력해 빚어진 사고다. 실제 삼성증권 발행 주식 수(8930만주)보다 30배가 많은 28억1000만 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입고됐고 이중 16명이 501만 주를 매도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직원들의 계좌로 입고된 주식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유령 주식인데 나중에 수습을 위해 주식을 사서 갚다 보니 공매도라는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공매도 폐지 주장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20만 명을 넘으면 답을 내놓아야만 하는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궁금하다.

올 초 시장을 휩쓴 가상화폐 열풍의 원인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불공정한 증권 시장 대신 젊은이들이 택한 곳이 가상화폐 시장이었는데 적어도 이곳에선 개미가 다윗 취급을 받지는 않았다. /장필수 전남본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